

전남, 노후·위험 등 시설 안전 강화

6월13일까지 배터리제조업체·전통시장 등 집중점검

전라남도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6월 13일까지 61일간 배터리제조업체, 폐기물처리시설,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등 1545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집중안전점검은 정부·지자체·도민이 함께 참여해 전남지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유형별 대상은 배터리제조업체, 폐기물처리시설,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등 최근 이슈가 된 시설물을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우선 선정했다. 토목·건축·전기·소방·가스 등 18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단,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등 민·

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또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이나 시니어 은퇴 공무원도 집중안전점검에 함께 참여해 안전 위험요소제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력 접근이 곤란한 교량이나 상하수도 시설은 드론을 활용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은 비파괴검사,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철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다.

/김 호 기자

북구, 유관기관 협력 ‘산불 대응’ 총력

무등산 정상 군부대 협업…산불 진화장비 전진 배치

경찰·소방·국립공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북구가 산불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구는 연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불 진화 장비 전진 배치, 드론 활용 산불감시,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한 산불 예방 활동 추진 등을 통해 빈틈없는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무등산국립공원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장비를 전진 배치한다.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는 현장 도착 시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되며 진입도로가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워 산불 발

생 시 조동 조치가 중요한 곳이다.

이에 무등산국립공원과 함께 오는 15일 정상부에 주둔 중인 군부대에 등짐펌프 40개와 불갈퀴 20개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전달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산불 확산 방지를 도모한다.

또한 산과 인접한 64개의 마을에 하루 3회씩 산불 예방 안내 방송을 실시해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을별 대피소 지정, 산림 인접 지역 요양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시설별 대피소 및 담당자를 지정했다.

아울러 경찰, 소방 및 국립공원과 협력을 통해 불법소각 합동단속, 화목보일러 사용 능가 합동 점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동기 기자

서구, 사회적경제 기업가 성장 돕는다

로컬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20명 선착순

서구가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마을 BI(Brand Identity), 문화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회적경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마을과 골목,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마련했다.

아카데미는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서구 마북동에서 오는 25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사

회적경제 기업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을 위한 심화 교육 ▲선배 기업가 특강 등으로 이뤄진다. 또 아카데미과정 이후 참여자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마을공동체·마을활동가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주민 2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조순주 기자

전남-울산자치경찰, 도박중독 예방 협력

청소년 교육·홍보·예방정책 실무협력 방안 등 협의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업무협의를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검거된 도박범죄소년은 564명으로 전년(169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은 이 중 34명으로, 전국 대비 6% 수준이다. 이는 2023년 6명(3.5%)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로, 도박이 청소년 사

이에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도박 실태 점검 및 도박치유센터 설립 추진 ▲국회 및 기재부·문체부 대상 지원건의 ▲지역 실무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논의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은 타 시·도와 협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호 기자

미혼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생각 없어’

결혼 의향 없거나 결정 못해…남 42%·여 55%

망설이는 이유, 女 “시댁관계”·男 “전세자금”

미혼 남녀 2명 중 1명꼴은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 결혼 생활비 부담을,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미혼 남성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보다 여성은 ‘전세자금 마련’, ‘학력’ 등에서 더 높게 희망했다. 반대로 미혼 남성은 여성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시댁과 가까이 지내기’, ‘육아·가사 참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22일 전국 거주하는 만 20~44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은 미혼 남성 41.5%, 여성 55.4%였다. 평균 2명 중 1명 가까이는 결혼을 결정하지 않거나 결혼할 마음이 없는 셈이다.

그 이유로 미혼 남성은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25.4%), ‘소득이 적어서’(10.4%) 항목에서 미혼 여성보다 각각 13.8%포인트(p), 7.2%p 높았다. 반면 미혼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 문화·관계가 싫어서’(12.3%), ‘결혼생활로 인해 본인의 커리어에 영향을 줄까 봐’

(10.1%에서 남성보다 각각 9.4%p, 8.7%p 높았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고 응답한 미혼들이 제시한 이유를 보면 여성의 경우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9.5%)를, 남성은 ‘결혼생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25.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미혼 남성이 느끼는 자신이 갖춰야 할 조건 대비 여성이 희망하는 남성 조건이 더 높은 항목은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6.5%p),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할’(6.4%p), ‘정규직이어야 한다’(3.2%p)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혼 여성이 갖춰야 할 조건 대비 남성이 희망하는 여성 조건이 높은 항목은 ‘시댁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17.2%p), ‘육아·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10.7%p)

등으로 조사됐다.

미혼 여성이 희망하는 남성의 조건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95.4%), ‘육아·가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93.5%), ‘소득이 충분해야 한다’(9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이 희망하는 여성의 조건은 ‘육아·가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97.3%), ‘직업을 가져야 한다’(82.9%), ‘소득이 충분해야 한다’(70.4%) 등이었다.

미혼 남성은 58.4%, 여성은 40.9%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 3명 중 1명꼴인 33.1%는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 여성은 ‘태어난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23.6%)를, 미혼 남성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34.1%)이라고 응답했다.

/뉴스1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 사업장 5곳 적발

광주시는 최근(4월 1~2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5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하남·평동산단 등 지역 주요 산업단지에 소재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총 22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등 행정 사항은 광주시 사회재난과(민생사업수사팀)에서 수사하고, 기타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교육청, 장애인의 날

맞아 ‘공감문화 조성한다’

광주교육청이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2025 장애 인권 주간을 운영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권 인권 주간은 이날부터 25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표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교육현장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에 장애공감 문화 조성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을 보낸다.

본청·산하기관·각 학교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 슬로건 현수막 전시,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 이해 수업, 계기 수업 자료 제공, 장애 인식개선 신문 및 교육자료(PPT) 2종 보급,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8일에는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이 교육감은 “장애 인권 주간을 맞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누구나 존중받는 세상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순주 기자



광주시교육청, 세월호 참사 11주기 목포신항만 참배

광주시교육청이 14일 목포 신항만 세월호 인근에서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고인자 정책국장, 백기상 교육국장, 박준수 행정국장 등 직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11주기 참배를 진행했다.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은 이날 한화 후 목념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산구, 에콜리안 광산CC 조기이관 업무협약 체결

7월 1일부터 광산구 직영…새 이름 및 슬로건 공모



광산구가 에콜리안 광산 CC 조기이관의 첫발을 뗐다.

광산CC는 광산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총 267억 원을 투입해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대에 32만 6822㎡ 규모(9홀)로 조성한 친환경 대중 골프장이며, 광주송정역에서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광산구는 14일 체육공단과 에콜리안 광산CC조기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거창CC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됐으며, 지난 2023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체육공단과 상호 조율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하형주 이사장, 김명수 광산구의회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체육공단은 골프장 관리·운영권을 7월 1일부로 광산구로 조기 이관하고, 광산구는 체육공단 전체 투자비 137억 원 중 미회수 투

자금 약 75억 원을 향후 6년간 분할 상환, 공공형 골프장 기능을 유지키로 했다.

광산구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7월 전까지 홈페이지 구축, 관련 조례 제정, 시설물 정비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광산CC를 즐길 수 있도록 △골프인재 육성 △구민 골프교실 운영 △골프 무료레슨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광산구는 15일부터 30일까지 골프장 새 이름 및 구호(슬로건) 공모도 진행한다. 심사기준(△직관성 △대중성 △독창성)에 따라 선정된 2명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새 이름 및 구호(슬로건)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산구 체육진흥과(062-960-3807)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

내달 말까지 소·돼지 농장 100곳…백신 실효성 등 점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의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농장과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소·돼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지역 20개 농장과 도축장 출하 80개 농장의 소·돼지

530마리이다.

지난해부터 항체검사 이력이 없는 농장과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이었던 농장, 자가접종 농장을 우선 검사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인 소 80%, 돼지 비육돈 30%, 돼지 번식돈 60%에 미달할 경우 해당 농장에서 16두를 추가 채혈해 재검사를 실시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체 검사에서 양성 개체가 확인되면 구제역 의심축으로 판단해 이동 제한, 확대 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점검은 광주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방역조치”라며 “축산농장에서는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mae.co.kr